

주간 이슈 리포트

8 호

2003년 9월 첫째주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부시정권 문제
- 노동자 세상:	주 5일, 6일 아빠
- 통신정책 이모저모:	유비쿼터스란?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부시 정권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

☞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다음순으로 이라크에 파병을 한 나라이다. 지금 600여명의 대한민국 아들이 태양의 나라 이라크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미국, 영국 호주 등에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무기전문가 데이빗 켈리 박사의 자살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싸고 블레어가 이라크관련 정보를 과장 왜곡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민의 50%가 부시재선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정부가 말하던 파병 논리중 하나였던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된다는 것이 지금 도움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전쟁의 이유, 파병의 논리가 모두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이다.

다음의 글은 알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뉴욕대학에서 한 연설 내용의 일부가 8월 28일에 뉴욕타임즈 신문에 전면 광고로 실린 내용을 시대정신에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북핵 문제, 우리나라의 자주성,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 - 알 고어의 연설.

우리 나라(미국)가 나아가는 방향이-이라크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저에게 큰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지금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잘 드러내 보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미국인들은 기초적인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에 대해서 철저히 논의한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

다. 그 결과로 우리의 병사들은 잘못된 계산과 판단, 그리고 병사들은 물론 우리 나라 전체를 위협한 지경으로 몰아 넣은 유례가 없는 실수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공론의 과정이 없었던 이유는 미국 국민들에게 주어졌던 정보(impressions) 중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후에 거짓(false impressions)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사담 후세인이 9/11 사건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 사담이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 카에다와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 사담이 핵폭탄을 제조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사실, 사담이 치명적인 독가스와 세균을 테러리스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우리 군대가 이라크 국민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록 전쟁에 반대했지만 일단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나면 군대와 돈을 제공하면서 기꺼이 미국의 편에 설 것이라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위의 사실은 모두 끔찍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담은 9/11 사건에 조금도 관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 카에다와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며, 그의 대중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제공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핵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의 핵에 대한 문서들은 실제로 위조(forged)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던 이라크 국민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 우리의 병사들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끝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전혀 미국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납세자들은 일주일에 무려 10억 달러(대략 1조 2천억 원 - 역자주)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정보는 다른 잘못된 정보를 낳습니다. 그것은 단지 해외 정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 문제에서 전혀 반감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시의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된 예측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시의 세금 감면이 새로운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세금 감면에 의해서 촉발될 경제 성장이 새로운 재정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 적자로 회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혜택이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경제가 침체되면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평균적인 수입을 올리는 중산층 가정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도 역시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우리는 수백만에 이르는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무려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의 대공황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재정 적자의 규모는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택이라는 것도 물론 소수의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아니면 무소속(an independent)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노력에 큰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으

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방식과 미래에 대한 논의에 사용되는 기초적 사실(basic facts)들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인 논쟁의 과정에서는 때로 과도한 수사학이 동원되거나 믿음에 대한 비약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사학 혹은 비약 차원의 문제와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조작하는 조직적인 노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불행하게도 부시 정권 하의 미국은 후자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부시 정권은 마치 자신들은 이미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며 그에 반하는 다른 사실이 혹시 존재하더라도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개방적인 논의의 과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그리고 그들과 이데올로기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소수의 이익 집단들은 서로의 의제(agenda's)에 대한 충실한 믿음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커질수록, 그들은 점점 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체니 부통령이 2001년에 오일과 가스 산업체의 CEO들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진 후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행정부의 법률안 패키지에 집어넣었던 것이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백악관이 불과 몇 주일 전에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국)이 작성한 공공 보고서(public report)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련된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제거하도록 명령한 것도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의 한 관리가 부시의 세금 관련 법안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결론을 바꾸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수시로 받는다고 밝힌 것도 이런 예의 하나입니다.

해외 정책이든, 경제든, 혹은 환경이든, 제가 바라보는 현실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보와 증거를 잘못 사용하고 선택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자신의 친구와 지지자들을 위해서-마련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국 국민들이 그의 논점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매우 효과적인 선전 기계(propaganda machine)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핵심 독트린은 정부(government)란 매우 나쁜 존재이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 이너 서클(inner circle)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산업에게 엄청난 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문제의 대부분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조언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부시에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연설의 전체 내용은 www.moveon.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대정신 펌 -

“ 주 5일 아빠, 주 6일 아빠 ”

8월 29일 국회에서 주 5일제 근무 단축 논의 5년만에 통과되었다.

언론에서는 ‘주 5일,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뀐다’, ‘생활혁명 주 5일 근무’, ‘삶의 질 향상’ 등의 큰 카피기사로 화려한 통과(?)를 축하해주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응답자의 46.2%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자기 계발을 하겠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응답이 실제 적용에서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00만명의 20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주 5일 근무제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8년후에나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별적 노동시간단축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들은 일터로 나가느라 아이들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 5일 아빠나 엄마(모두)는 아이들과 1박2일 여행을 갈 수 있겠지만, 주 6일 아빠네 가족은 아이들이 토요일 방치되거나 또는 또래끼리 몰려다니며 유혹에 빠질 가능성, 아니면 학교대신 종일반 학원으로 떠밀려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KT는 대기업 사업장이기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은 우리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세상이 분명 아니다. 그리고 KT라는 대기업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운이 좋았기 때문임을 솔직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적용에 더욱이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지역감정이 사회문제의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제 한동안은 주 5일제를 둘러싸고 상대적 차별성과 박탈감이 한동안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노동시간단축 결정을 한 국회의원들은 무슨 권리로 이런 불평등한 결정을 할 수 있던말인가? 더군다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임기 4년보다 두배나 되는 8년이 후 시행되는 차별적 노동시간 단축을 800여만명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폭력에 가까운 행위이다.

더군다나 찬성 141명, 반대 57, 기권 32표의 찬성이외의 표는 이런 차별적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에 입각하여 도입시기를 더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인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이땅의 노동자들의 힘을 표로 확인하여 혼줄을 내주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위노조에서는 단체교섭에서 최선의 안을 만든다. 그리고 이 안을 관철하기위해 다양한 단체행동과 여론전, 인내심 있는 교섭을 전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안에 합의의 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투표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5일제가 논의되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길거리에서 매우 원칙적인 이야기인 ”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만을 외쳤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 국회에서 재개된 노동시간 단축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되 버릴뿐 교섭의 전략과 전술은 부재한 상태로 시간만을 보냈을 뿐이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노동자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노동자에게 최악의 노동시간단축제가 법제화된 것이다. 그들은 욱먹을 짓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질 줄 모르는 않았을 것이다. 총과업을 결정하고 지침을 내렸는데, 단위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았기에 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도부는 장시간 동안 이런 상황과 조건에 맞는 교섭과 투쟁을 조직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책임있는 지도부라면 욱먹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노동시간 단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정은 노동계가 넘어야 할 많은 산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것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차이, 노동계의 정치력과 교섭력, 투쟁 남발의 문제, 책임성, 연대의 내용....

책임전가가 아닌 희망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책임이 있는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혹시 다 알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난 주 노동계 이슈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화물연대 투쟁에 대해 정부가 강경책을 쓰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있는 화물연대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만약 압수수색이 강행된다면 최근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정권 내내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찬성 141” 주5일제 통과

29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통과시켰다.

다음 주 노동계 이슈

노조전임자수 축소 대체근로 허용

'노사관계 로드맵' 내달 4일께 발표

정부가 다음달 4일 현 노사관계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동부, 청와대 노동개혁 T/F팀이 주축이 돼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해 온 가운데 지난 18~20일 학계 인사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회 워크숍을 끝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최종 손질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 아래 △국제기준의 노동권 보장 △노조 과보호 제도개선 △노사자치주의 제도정비 △노사 파트너십 구축 △정리해고·임금 유연화 등을 골자로 기존 제도의 대폭 손질이 예상된다.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 민영 KT 1을 맞이하여 화두는 KT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느냐?로 모아진다. 시장경쟁, 유선사업의 축소, 각종 규제 정책 등의 현실적 난관을 뛰어넘는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는데, 향후 다가오는 세상은, 개별 사업의 수익성 영역을 뛰어넘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SK텔레콤은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공간적 제약 없이 편리한 접속이 가능한 ‘내손안의 TV’ ‘나만의 방송’ 개념의 개인형 매체이자 진정한 ‘기기융합(device convergence)’을 실현할 것이라고 한다. KT도 국내 최대의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비쿼터스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KT는 ALL IP, 브로드밴드, 유무선통합, e포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가는 KT 간부가 유비쿼터스 개념조차 몰라서야...
공상영화에 나올만한 일들이 이제 통신을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서 적용된다고 한다. 유비쿼터스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유비쿼터스란(ubiquitous)?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있는’을 뜻하는 말이다.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98년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체록스 펠로앨토연구소의 마크 와이저 소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메인프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의 물결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자동차, 가정, 실외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IT 활용이 늘어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는 등 IT산업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 커지게 될 전망하고 있다.

마쓰시타는 홈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한 가정내 유비쿼터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히타치는 유비쿼터스의 관건이 정보보호라고 보고 시큐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소니는 각 기기간의 호환성 구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MS는 가정용 정보단말기인 '미라'라는 컨셉트를 들고 나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집 밖에서 손에 찬 시계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해 날씨를 알아보고 집안에 있는 난방기의 온도를 원격으로 조절한다. 이같은 일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는 환상이 아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언제오는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막은 생각보다 가깝게 다가왔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컴덱스 기조 연설에서 'SPOT(Smart Personal Object Technology)'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SPOT의 스마트 오브젝트는 인터넷 기능을 구현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람시계, 부엌용 전자기기, 스테레오 장비 등과 같은 소형 전자기기. 즉 유비쿼터스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전세계 IT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중 하나인 게이츠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한 셈이다. MS측은 SPOT가 구현된 제품이 내년초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MS가 기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또 현재보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프로세서와 각종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들이 스마트 오브젝트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내셔널세미컨덕터의 회장겸 CEO인 브라이언 할라도 같은 행사 기조연설에서 "향후 수년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도체가 들어간 수백에서 수천개의 전자기기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개발중인 SPOT 기반 반도체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칩을 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통해 텔레매틱스, 원격제어, 위치추적서비스, 모바일 방송, 영상전화, 모바일 커머스 첨단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다.♪

만

화

방

아무리 좌익이 싫다해도 ...



무등만평

장승태

